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투표율 1/3→1/4 요건 완화

청구인수 기준 하향…문자메시지·인터넷으로도 서명 요청
주민소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제도 실효성 높아질 듯

이태원 참사 이후 헬러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임기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부터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대해 소환투표를 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해직시키는 제도지만 이처럼 까다로운 청구 요건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 외에도 청구 서명자 비율, 투표율 등에서 문턱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민소환 투표 활성화를 위해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

투표 청구 서명인 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율 기준도 청구권자(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사이트 게시 등을 통한 서명 요청 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여러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여야가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예상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 유권자(유권자)의 '10% 이상'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이다.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유권자 수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 청구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 수를 5만 이하, 5만 초과-10만, 10만 초과-50만, 50만 초과-100만, 100만 초과-500만, 500만 초과 등 6개 구간으로 나눠 청구인 수 기준을 달리했다. 대체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요건이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유권자 5만명 이하의 서명인 수는 '유권자 수의 15% 이상'이며 '5만 초과 10만

이하' (7천500+유권자 수 중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 초과-50만' (1만4천+유권자 중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 초과-100만 (5만8천+유권자 수 중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 초과-500만 (10만3천+유권자 수 중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초과 (38만3천+유권자 수 중 500만을 넘는 수의 5%)로 각각 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유권자 수가 800만이 라면 개정안에 따른 기준 서명인 수는 '38만3천+300만의 5%'로 계산해 53만3천명이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장의 경우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인 80만명이 서명해야 소환투표를 할 수 있었다.

개표 요건인 투표율 기준도 유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아졌다. 다만 투

표자의 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유권자 6분의 1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달았다.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주민소환 확정 조건은 그대로다.

주민소환 투표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 및 만료 '1년 이내'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6개월 이내'로 줄어지는 주장도 몇 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 투표 126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투표가 실시됐지만, 나머지 115건은 서명자 미달이나 철회 등으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서명자 미달로 각하 처리된 것이 한 예다.

투표가 실시된 11건 가운데 2007년 경기 하남시 시의원 2명이 소환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없이 무산됐다.

2007년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했다. 지난해 1월에도 경기 과천에서 과천청사 유류부지 주택공급과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투표율이 21.7%에 그쳐 개표 없이 종결됐다.

/연합뉴스

양향자 “주민 동의 없는 매립 절대 안돼”

서구 풍암호수 매립 사업 추진 제동 걸릴 듯
환경부장관·광주시장 등과 릴레이 면담 개최

광주시와 민간 공원개발사가 추진하는 풍암호수 매립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서울)은 4일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만나 광주 풍암호수 매립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며 “호수 원

형을 보전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양 의원은 풍암호수 수질 개선과 관련한 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장관(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2일), 광주시장(3일) 등과 릴레이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

풍암호수는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140만 광주 시민의 휴식처다. 그런데 수년 동안 호수에 녹조와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9월 27일 발표한 ‘풍암호수 개선계획’을 통해 호수 바닥을 토사로 매립하고 수질개선 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의원은 “풍암호수는 광주 시민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적 자산”이라며 “광주시가 호수 매립의 수질 개선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수를 매립하자는 주장을 주민들께서 납득하겠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양 의원은 “매립 시 정마와 태풍 기

간의 홍수가 우려되고, 녹조 발생, 지하수 자원 고갈 및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호수 매립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호수 매립의 과학적 수질개선효과를 입증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양 의원은 “환경부장관에게 풍암호수 매립 시 실제 녹조 감소 효과, 유속 증가율, 지하수 사용 및 자연 정화형시설의 수질개선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또한 풍암호수의 원형을 보전되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에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정부·광주시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서동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4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과의 출입금지’ 2개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 부과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

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수기자

‘여수 만홍지구 택지개발’ 강행 안한다

국토부·LH 측 김희재 의원에게 입장 밝혀

반대 여론이 많았던 여수 만홍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는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은 4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LH 지역균형발전사업처 관계자가 이와

같이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수 만홍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부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집회 도중 고령 주민 1명이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1일 국토부와 LH로부터 만홍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

정책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희재 의원은 “수 대에 걸쳐 삶의 터전을 이어온 고향 어르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행위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토부와 LH의 전향적인 태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시·도지사協, ‘지방외교’ 본격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외교 본격화를 위해 지난 2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2년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13회 째를 맞이하는 연례행사로 올해에는 78개국 100여명의 주한외국대사들이 참석해 사상 최대 성황을 이뤘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외교는 국가 대 국가 즉, 중앙외교가 중심이었고 지방은 ‘국제화’라는 용어로 대변되듯 외교의 주체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 및 중앙외교의 시각지대를 채우는 보완제이자 완충제적 역할을 하는 국가 전략으로의 지방외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